

#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에너지부문의 모습



柳志喆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략개발연구팀장 >

## 최

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전망자료에 의하면 1995년 올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은 미화로 일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960년대 초에만 해도 100달러 미만이던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불과 30여 년동안 100배 이상 증가하여 오늘과 같은 일만달러 시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사실일 수 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전쟁후에 민생고를 걱정하며 국내 부존자원이 척박한 여건 하에서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에 기초하여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여 해외로부터富를 모아들이는 대외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과 해외건설로부터 벌어들인富를 제철과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1980년대 이후의 자동차와 조선과 같은 기계산업과 TV, 컴퓨터와 같은 전자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개발과정을 돌이켜 보면 마치 잘 짜여진 하나의 파노라마와도 같다.

경제개발과 성장은 富의 축적과 축적된 부의 평등한 分配의 달성을 의미한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원,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력은 풍부한 반면, 자원과 자본은 부족하여 국내 공급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不均衡 상태의 시장 여건이었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과 자본의 공급 조달은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투입과 배분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었었다.

국민소득이 일만달러를 넘어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요소시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은 일부업종에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크게 변모하였으며, 자본시장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축적으로 순외채 규모가 국민총생산의 5%미만 수준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자원시장은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 따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1994년에 무려 96%에 이르는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그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크게 신장되어 왔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제한송전은 물론이고, 서울시 승용차와 버스에 대하여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휘발유와 경유의 배급제 실시, 겨울철에는 연탄 수급파동이 계속되었다. 그 이후 이어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에 힘입어 정유설비와 발전설비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에너지 공급설비 확장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다. 1970년대에 2차페에 걸친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원자력과 유연탄, 천연가스 등이 국내 에너지수급시장에 도입되면서 에너지 종류도 다양하여지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무연탄의 수요는 격감하고 전력과 석유, 가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소위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오늘날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특징적 모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경제학자인 아모리 로빈스(Amory Lovins)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발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의 투입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경제개발

에너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무연탄의  
수요는 격감하고 전력과 석유,  
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오늘날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특징적 모습이 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시장은  
국내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 따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4년에  
96%에 이르는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형태를 「경직된 개발 과정(Hard path)」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 과정은 서구식 경제개발 모형을 답습하는 것으로 1987년 UN의 세계 환경 및 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개발 형태가 3가지의 위기, 즉, 환경위기, 개발한계의 위기, 에너지 위기에 총체적으로 봉착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 일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은 우리나라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와 3만달러 시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파생하는 위기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위한 기본적 인식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소득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3배 수준 이상인 반면, 우리의 일인당 에너지소비 규모는 거의 일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 일인당 석유정제설비 규모는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의 1.3~1.4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2006년까지 14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25개의 유연탄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이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토의 수용가능성 문제, 그리고 화석연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가 당면하게 될 환경위기, 개발한계의 위기,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토마스 쿤(Thomas Kuhn) 교수는 인류가 이미 「패러다임(기본 체계의 형태)」의 혁명(Paradigm revolution)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은 사라지고, 인류의 번영과 경제성장이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부로부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노출되어 있다. 세계 무역질서와 경제 구도는 이미 WTO체제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1992년 리우(Rio) 「기후변화협약」 제정 이후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1997년에는 WTO체제 내에서 무역에 대한 환경규제 설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제화될 예정이다. 국민소득 일만달러시대에 우리 경제가 무차별적인 국제적 규제와 주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개방화, 자율화, 경쟁 도입과 함께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소위 3E의 통합적 조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성숙한 모습에 맞게 변해야 한다. 경제개발 초기에 설정된 패러다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도 정부지원제도에 의존하고, 규제의 보호벽 속에서 안주하려 하고, 개방화와 자유화에 엄살을 떨고, 생산설비 확장을 위주로 투자하는 관행 등이 산업 스스로의 이익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부문에서 낙후되어 있는가를 재조명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1995년은 국민소득 일만달러 달성 뿐만 아니라, 해방과 분단 50주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등의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독일 국민은 통일 후 인구비율로 볼 때, 4명의 서독인이 1명의 동독인에 대하여 통일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명의 남한사람이 1명의 북한동포에 대해 통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독일국민보다 높은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에너지 교류는 통일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개발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단위로 특화된 지역에너지계획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1995년은 국민소득 일만달러를 달성하는 우리 경제의 전환점이지만, 우리의 에너지부문의 모습은 아직도 과도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정책적 접근이 요망된다. ㉟

앞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와  
3만달러시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파생하는 위기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위한 기본적 인식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